

민실위 보고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발행인 : 최성혁
 서울 마포구 성암로 255
 전화 : 789-3883~6 팩스 : 782-0135
 인터넷 홈페이지 : www.mbcunion.or.kr

2021년 8월 17일(화)

우리는 순항하고 있는가?

지난 한 달여간 MBC는 본사 취재기자의 경찰사칭 문제와 도쿄 올림픽 중계과정에서 출전국 비하 등 잇따른 사고로 뉴스에 중심에 섰다. 사장의 대국민 사과와 진상조사, 관련자 징계 등 일련의 조치와 별개로 MBC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더욱 따가웠고, MBC 취재진을 대하는 시민들의 반응도 차가워졌다. 이번 민실위 보고서는 연이은 사고와 혼란 속에 과연 우리 뉴스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진단해보고, 높아진 시민들의 눈높이와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우리가 공영방송으로서 저널리즘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무엇부터 변화되어야 하는지 살펴봤다.

우리는 얼마나 변했나?

2017년 12월 26일 다시 <뉴스데스크>를 시작한 지 3년 7개월이 지났다. 뉴스 시간은 와이드 편성 아래 계속 늘어나 100분까지 이르렀다 최근 들어서 소폭 줄었다. 외형상 변화도 많았다. 주제별로 묶는 블록 편집, 한 주제를 며칠간 이어가는 연속 보도도 늘어났다. 새로운 포맷들도 다수 등장해 이제는 브랜드 네이밍화 되기도 했다. 팩트체크 코너는 이름을 바꾸며 변화했고, 현장성을 강화한 '바로 간다', 약자의 눈으로 보는 '소수의견'과 '제보는 MBC', 기존의 TV 뉴스 문법과 다른 '로드맨과 거리의 경제', 정치권 뉴스를 자유로운 형식과 우리의 시각으로 접근한 '정참시'까지 다양해졌다. 비리와 부패를 끈질기게 추적하는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와 데이터 저널리즘을 바탕으로 한 '기획 취재'도 안정화에 접어들었다. 특종 보도도 많이 늘어나 올 상반기에만 방송기자 연합회에서 9차례 수상하기도 했다. 보도국과 뉴미디어뉴스국을 합친 '통합뉴스룸'을 구축한 지 2년여 만에 MBC 디지털 뉴스의 구독자 수나 조회 수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런 변화와 달리 취재기자의 경찰 사칭 문제와 조국 국면 이후 계속된 MBC 보도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은 공영방송으로서 MBC 뉴스의 역할에 대한 재정비와 근본적인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고개 드는 '편향성' 우려...무터진 문제의식

조국 사태 이후 우리 뉴스는 '편향적'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자 개인이 그리고 보도국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정서가 특정 입장과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공영방송'의 뉴스가 특정 정치집단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비쳐 선 안 된다. 특히 이슈별 취사선택에 '패턴'이 보이고, 사안을 다루는 방식이 일관되지 않는다면 편향성 논란은 계속 반복될 것이며 이는 MBC 뉴스에 대한 신뢰도와도 직결된다. 7월 한 달 <뉴스데스크>가 주목한 이슈 가운데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유죄 확정 보도는 이런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2심 판결' 당시 우리는 세 폭지로 톱 블록에 비중 있게 보도했다. 유죄 판단 이유, 김 지사 반발, 정치적 파장 등 우리만의 시각을 담았다. 그러나 지난 21일 우리는 저녁 메인뉴스를 하는 방송사 가운데 유일하게 해당 사안을 톱 블록이 아닌 15, 16번째 <뉴스데스크> 후반부에 배치했다.



(▲ 지난달 21일 저녁 메인뉴스 방송사 '톱 뉴스' 보도 화면)

큐시트	MBC 뉴스데스크(7월 21일)
1~6번	코로나 6폭지
7~8번	폭염 2폭지
9~10번	도쿄 올림픽 2폭지
11~14번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 + 조종사 가네 휴먼 + '본보' 성 증장제 + 쿠방 공정위 제재
15번	김경수 '징역 2년' 실행 확정...경남도지사직 박탈
16번	"판결 존중하지만 유감"..."대통령 사과해야"



"김경수 재판 보도가 톱 블록이 아닌 게 매우 창피합니다. 타사들이 모두 비웃습니다. 특정 뉴스의 가치를 수많은 언론사와 현저히 다르게 판단했다면 이는 전문성이 크게 부족하거나 아니면 편향된 시각이 개입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데...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취재기자 A)

"MBC 색깔에 맞춰 비판적으로 보도를 할 수는 있으나 톱 블록으로 가지 않고 15번으로 빼는 건 시청자에 대한 모독 아닌가요? MBC 뉴스로 그날 하루를 이해하려는 시청자에게..."
 (취재기자 B)

민실위원들은 "2심 판결 당시 세 폭지로 톱 블록에 비중 있게 보도했던 우리의 가치 판단이 대법원판결로 정치적 의미와 파장이 커졌는데도 오히려 뉴스 후반부에 배치됐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내용도 타사와 비교해 소극적이었다. 타사가 징역 2년의 유죄가 확정된 이유와 핵심 쟁점인 공모 관계에 대한 분석, 반전을 거듭했던 댓글 조작 사건이 4년여 만에 여권 유력 정치인의 낙마로 결론 난 과정을 자세히 보도했지만, 우리는 대법원판결 분석에 그쳤다. 정치적 파장에 대한 보도도 댓글 조작 사건이 지난 대선 때 일어났고 김 지사가 친문의 핵심인 점을 고려해 타사가 청와대의 반응부터 살펴본 반면, 우리는 김 지사의 결백을 믿는다며 유감을 밝히는 여권 대선 후보 주장들의 입장에서 보도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해당 문제 제기가 외부에서 먼저 지적됐다는 점이다. 특히 보도국의 공식 논의 기구인 편집회의에서 보도 이후 공식적으로 이에 관해 설명하거나 논의하지 않았고, 보도 당일에 기사를 담당할 일선 기자부터 팀장, 보도 책임자까지 '큐시트 후반부 배치에 대해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문제 제기하지 않았다. 우리 내부의 점점 절차나 문제의식이 무터진 게 아닌지 성찰이 필요하다. 또한, 당장 뉴스 제작이 급하다고 편집부와 해당 부서의 문제지 내 책임은 아니지 않나며 합리화하지 않았는지 뒤돌아볼 대목이다.

방역 당국 대처의 안이함을 지적하지 않은 MBC 보도



(▲ 지난달 12, 15일 MBC 뉴스데스크 '백신 접종 예약사이트 먹통' 보도 화면)

지난달 <뉴스데스크>가 주목한 이슈 가운데 '백신 예약사이트 먹통' 보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잇따랐다. 민실위원들은 시청자의 관점에서 방역 당국 대처의 안이함을 지적하기 보다는 우리 보도가 방역 당국의 입장 전달에 주력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지난달 4차례 연속 백신 접종 예약사이트가 먹통 되는 동안, 우리는 ① 대상자의 절반밖에 안 되는 백신 물량을 확보해 예약이 조기 마감된 점 ② 사전 공지 없이 예약을 받은 점 ③ 우회경로를 통한 이른바 세치기 예약 ④ 백신 접종 예약 과정에 명단 누락과 입력 오류 등 혼선을 빚은 이른바 세치기 예약 ⑤ 백신 접종 예약 과정에 명단 누락과 입력 오류 등 혼선을 빚은 예약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반면 타사는 방역 당국 대처의 안이함을 비판하며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코로나 보도에 있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불필요한 공포감을 조성해선 안 된다는 뉴스 방향에 대해 민실위는 동의한다. 하지만, 감시와 비판 보도에 있어 지나친 신중함은 오히려 편향성 논란과 뉴스 방향에 대한 의구심만 키울 수 있다.

'선택과 집중'...여전히 모호한 뉴스 방향성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은 복잡한 이슈가 늘어났다. 매체의 종류와 수도 폭증했다. 수많은 정보가 쏟아진다. 더는 기자가 정보를 독점하지도 않는다. 뉴스 수용자들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듣고 싶은 정보만 선택해 자기 입장을 강화하는 경향도 심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우리 뉴스가 무엇을 선택해 집중하는 것과 달리 무엇을 생략해두는지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스럽다는 불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15일 인권사법팀은 전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담당 특수부 검사들이 재조사들을 상대로 허위 진술을 강요한 부분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자초한 합동 감찰 결과의 파장을 아이টে으로 발제했다. 특히 해당 사안은 윤석열-추미애 갈등을 촉발한 사건이었고, 윤 전 총장은 위증 강요 의혹의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입건된 상태였다. 앞서 우리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위증 강요 의혹을 여러 차례 보도하며 비중 있게 다뤘다. 선택과 집중에 따른 차별화된 MBC만의 뉴스를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당 아이টে은 보도 당일 뉴스데스크 진행 도중에 갑자기 빠졌다. 닷새 뒤인 20일 옵티머스 1심 판결도 당일 오후 <뉴스데스크> 큐시트에서 빠졌다. 기사 가치 판단에 대한 치열한 토론 없이 기사가 어렵거나 오후 큐시트에 기사가 넘친다면 빠졌다. 그리고 이렇게 빠진 큐시트에는 소위 그림 좋은 사건·사고 기사가 차지했다. 사건·사고 기사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만의 뉴스를 보여주자던 아이টে 대신 토론과 합의 없이 구성원들에게 소위 그림이 되는 사건·사고 기사가 우리 뉴스의 방향인 것처럼 비치게 해서는 안 된다. 사건·사고 기사 가치 판단에 있어서 CCTV와 블랙박스 만능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최근 들어서는 기록의 의미가 있다며 제작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우리 뉴스 방향에 대한 생산적 토론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제 다시 '큰 질문'을 던져야 한다

4년 전 우리는 파업 이후 'MBC 뉴스 재건'을 위해 쉽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다. 여러 차례 혁신 논의가 있었고, 이를 실험해보면서 실패도 했고 변화도 있었지만 제대로 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되돌아볼 기회는 별로 없었다. 그러는 사이 재정비할 틈과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다'라는 실망과 냉소만 커졌다. MBC 기자라는 자부심은 점점 낮아지고, 조직 분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침묵만 가득해지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저력 <뉴스데스크>에 나가는 리포트에만 집중하는 '납품업자'로의 삶이 반복된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많은 구성원이 노력하고 있지만, 그 노력이 타성 및 관행 아래 헛수고로 변질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부터 변화되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려 한다.

소통 부재...경직된 조직문화

통합뉴스룸은 3년 전 정보 공급자 시각에서 벗어나 출입처 중심이 아닌 이슈 중심의 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이슈에 따른 에디터-팀제로 조직을 개편했다. 이슈에 빠르게 대응하고 팀 간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술한 문제 제기에도 바뀐 건 없다. 현장에서 이슈가 터질 때 이 이슈가 어느 팀 담당인지를 두고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책임 소재를 따지기 좋아하는 조직 특성상 처음부터 이슈별 팀을 운영하는 건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정도로 힘든 일일 수 있다. 그러나 타사가 팀을 꾸리는 동안, 우리는 기자 개개인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공군 성폭력 사망 오펜 사건', '가짜 수산업자의 로비 의혹' 등 협업이 필요한 이슈 취재에 있어 우리는 여전히 기자 개개인이 알아서 취재하고 협업할 것을 요구하는 등 여전히 개인기에 의존하고 있는 게 단적인 예다. 기존 스트레이트부서에서 발제한 기획 아이টে과 기획취재부서에서 발제한 아이টে 간의 차이점을 모르겠다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보도국의 인력난은 조직문화를 더욱 경직되게 만들고 있다. 핵심 보직을 맡은 시니어 기자가 줄줄이 휴직하고, 구성원들은 공부·적성 등 여러 이유로 하나둘 보도국 밖으로 나가고 있다. 예전엔 예의상 한번 잡아보기도 하고 술잔을 기울이며 "조금만 더 버티보자"라며 다독이기도 하며 결속력을 유지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탈출(?)했냐며 부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다. 조직문화의 심각한 위기 신호이다. 그러나 인력 이탈은 꾸준한데 인력난을 해결하자는 노력과 구호는 보이지 않는다. 신입사원 채용은 만성화된 인력난에 숨통을 틔울 인공호흡기일 뿐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닌 데도, 보도국 책임자들은 여전히 조금만 더 견디자며 '고통 분담'만 강조하고 있다. 마땅한 탈출(?) 사유가 없어 보도국에 남아있는 구성원들이 짊어져야 할 몫은 커졌지만, 업무 지시와 방식은 그대로 반복되고 '하루살이' 삶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구성원들은 언제까지 스스로를 갈아 넣으며 버티 내야만 이 굴레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토론 없는 편집회의'

4년 전 MBC 뉴스의 미래를 위한 제언으로 보도본부 구성원들은 '광장형 편집회의'를 제안했다. 편집회의가 단순히 뉴스 생산을 위한 설계도를 그리는 작업을 넘어, 공정 보도를 위한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편집회의에 평가자 대표 참석이 의무화됐고, 내용도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그러

나 내용이 기록화되면서 현재의 편집회의는 다양한 의견 개진과 아이টে에 대한 가감 없는 비판과 지적은 거의 사라진 '죽은 편집회의'로 변질됐다. 특히, 의사결정 방식의 불투명성을 없애기 위해 취재부서에서 발제한 아이টে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킬 되고 어떤 아이টে이 추가됐는지 등 설명이 없다 보니 큐시트 배치 및 아이টে 가치 판단에 대한 구성원의 불만과 편집부의 가치 판단에 대한 인식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 구성원들에게 뉴스 모니터를 통해 쓴소리로 하자고 독려하면서도 정작 보도국 책임자들은 편집회의에서 쓴소리를 아끼고 있다. 변화의 출발점이 편집회의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다.

'무엇을 버려야 할지?'부터 논의해야

최근 '정치적 참견시점(정참시)' 코너가 <뉴스데스크>에서 사라졌다. 정치팀의 필수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올 하반기에 '마감뉴스가 부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상파 가운데 우리만 마감뉴스가 없다. 재난 등 특보 상황에 더 긴밀히 대응하는 데 필요하다"라는 설명 외에 구체적인 근거를 구성원들은 들은 적이 없다. 3년 전 뉴스 와이드를 추진할 때와 비슷하다. 마감뉴스의 부활 등 우리 뉴스를 변화시키려면 진지한 토론과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보도본부 책임자들이 "마감뉴스를 부활해도 구성원들의 노동강도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며 강행해서는 안 된다. 의사소통과 결정 구조의 전환이 필요한 대목이다. 지금의 보도국은 무엇을 추가해야 할지가 아닌 무엇을 빼고 버려야 할지부터 토론하고 논의해야 한다. 인사권자의 개인적 친분이나 거리에 따라 인사의 내용이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의사결정 과정을 반복해 겪다 보면 조직 내 무기력은 학습되고, 짊어져야 할 무게는 점점 더 젊은 사람들에게 지워진다. 변화는 우리 안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

아래는 '1년 7개월' 전 한 구성원이 올린 글이다. '우리가 왜? 지금도?' 해신이 필요할지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뉴스 개혁을 요구합니다>

- 보도국 한 구성원(2019년 12월)

국장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이미 출입처 제도의 폐해를 알고 있을 텐데 우리는 변화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출입처 제도가 공고하고 달리 대안도 없으니 그냥 지금처럼 하면 되는 건가요?

검찰발 기사를 쓰지 않는 것이 우리 뉴스의 차별점입니까?

그렇다면 청와대를 비롯한 다른 출입처 기사는 괜찮은 건가요?

최근 시청률이 오르면서 자화자찬만 쏟아질 뿐 비판의 목소리는 찾기 힘듭니다.

냉정하게 돌아켜봅시다.

우리 뉴스가 타사에 비해 뭐가 나은지 묻는 질문을 받는다면 하나라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여전히 뉴스는 짧아야 한다.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하고 그림 좋은 게 먹힌다는 식의 고루한 생각이 보도국을 지배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 뉴스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인력이 부족하다고요?

보도국에서 본인 이름 걸고 리포트하는 기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장에 더 많이 내보내겠다며 에디터-팀제로 개편하더니 더 많은 사람이 보도국에 들어와야 데스크를 보는 옥상옥 구조가 되진 않았나요?

연차가 쌓이면 현장에 나가지 않고 후배들에게 '하명기사'를 쓰게 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앉아서 데스크만 보다 보직에서 밀리면 보도국을 떠나는 게 제 미래가 되어야 합니까?

경험이 곧 정답인 능경시대에 살고 있나요?

설 새 없이 뉴스가 쏟아지는 마당에 언제까지 뉴스데스크에 올인해야 합니까?

5%대 시청률에 만족하는 분들께는 뜬금없는 소리겠지만 기자라는 집단 자체를 의심하며 날카로워진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하고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따라 이번 달 말 통합뉴스룸 국장에 대한 '중간 정책설명회'를 개최하려 합니다. 보도 부문 구성원들의 여러 의견은 변화의 밑거름이며, 뉴스 혁신 의지를 다질 기회입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